

전남대·조선대병원 18일 휴진...하루지만 환자들은 불안

의대교수 비대위에서 결정...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진료는 유지 19일부터 정상 진료 복귀...환자들 "의사만 바라보고 있는데 답답"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이 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예고한 '전면휴진'에 동참하기로 했다.

비록 하루지만 광주지역 양대 병원이 사실상 문을 닫는 것이어서 환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남대·조선대병원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오는 18일 의협의 전면 휴진에 동참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비대위는 설문조사를 통해 교수들에게 휴진 참여 의사를 물어 이같이 결정했다.

전남대 비대위가 전날까지 이를 동안 진행한 찬반 설문조사에는 광주본원, 화순전남대병원, 빛고을전남대병원 소속 교수(임상교수 포함) 총 371명

중 65.4%(243명)이 참여했다.

'의협 휴진을 지지하느냐'는 문항에 87.6%(213명)가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18일 전면휴진 동참여부를 묻는 설문에는 응답자(200명) 중 79%(158명)가 '찬성'이라고 응답했다.

전남대 비대위는 이날 '18일 하루 진료는 접겠습니다'라는 호소문을 냈다.

비대위 호소문에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의료 현장과 학교를 떠난지 4개월째 접어들고 있지만, 정부는 의료인들을 집단 이기주의로 몰아가고 육박하는데 혈안이 돼 있다"면서 "정부의 독단적이고 비열한 의대증원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전면휴진이라는 마지막 수단을 선택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자를 지키고 지역민 건강권을 수호하며 진정한 지역의료의 발전을 위한 결단이라는 점에서 지역민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조선대 비대위도 같은날 전체교수회의를 통해 18일 전면휴진에 동참하기로 했다.

조선대 비대위 설문조사에는 총 141명의 조선대의대 교수 중 85.1%(120명)이 참여해 84.2%(101명)가 18일 휴진에 찬성했다.

조선대의대 교수평의회는 성명서에서 "대한민국 의료와 의과대학 교육체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켜보아야 하는 의과대학 교수들의 심정은 참담함을 넘어, 극심한 무력감과 절망감,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지경"이라면서 "조선대의대 교수 일동은 전국 대학병원의 휴진 결의를 지지하며, 우리 병원도 적극 동참한다"고 밝혔다.

다만 두 병원 모두 응급·외상·감염·분만·신생아·중증 및 신장투석 환자 등 필수 진료과는 휴진하지 않는다.

두 대학 교수들의 이같은 결정은 정부와 의대증원을 놓고 대치하는 의협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연대 투쟁'으로 분석된다.

환자들을 위해 휴진 다음날인 19일부터 정상진료에 복귀하기로 한 것은 환자불편도 고려한 결정으로 받아들여진다.

전남대와 조선대병원 비대위 관계자는 "정부가 기존 대응방법을 고수한다면 의료계도 전면 무기한 휴진이라는 최후방범을 쓸 것이고 광주지역 상급병원도 동참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전면휴진 소식에 지역 환자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

전남대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15일 퇴원을 앞둔 고종복(72)씨는 "퇴원 날짜를 받았으나 지금도 몸이 좋지 않아 걱정되는 데 담당교수가 없다고 하니 불안한 마음뿐"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환자 보호자 김모(56)씨도 "어머니가 척추염으로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다. 교수님들까지 파업해

버린다하니 걱정이"면서 "환자들은 의사만 바라보고 있는데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전남대에서 치료 중인 한 환자는 "아이랑 내가 루푸스 환자라 약을 정기적으로 받는데, 18일 파업 소식에 진료 이면주로 당길 수 있냐고 했더니 교수님이 해외 출장이라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전공의의 공백에도 진료받을 수 있어 감사했는데 이제 내 차례인가 싶다. 아이 약이라도 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 막막하다"고 환자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정부 지침에 따라 이날까지 지자체 보건소에 18일 휴진을 신청한 광주·전남 지역 의사들이 소수여서 광주·전남 동내병원과 2차병원에서는 큰 공백이 생기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광주 5개 지자체에 18일 휴진을 신청한 병원은 총 50여곳으로 알려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지산지주택조합 '이중분양 사기' 80% 책임

"업무대행사 감독권 게을리 했다" 항소심도 계약금 80% 반환 판결

법원이 이중분양 사기사건과 관련, 광주시 동구 지산동 지역주택조합(지산 지주택)에 80% 책임이 있다고 봤다.

광주지법 민사4부(부장판사 김양섭)는 A(77)씨가 지산 지주택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계약금의 80%를 반환하라'는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31일 주택 홍보관에서 조합원 모집대행사 직원 B씨에게 안내받고 지산 지주택 조합원 가입계약서를 작성했다.

이어 B씨가 지정한 '지산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추진위)명의 계좌로 총 4600여만원을 이체하고 '계약금 입금확인서'를 교부받았다.

하지만 지산 지주택 업무대행사를 실제 운영하던 추진위 위원장이 다른 이들과 공모해 분양가의 10%를 할인하는 조건으로 신탁회사 계좌가 아닌 추진위 계좌 등으로 분양대금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중분양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이 배정받은 아파트에 선행양자가 있

다는 등의 이유로 조합원으로 인정받지 못하자 지산 지주택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지산 지주택 측은 조합가입계약서상 분담금 입금계좌로 입금하지 경우 모든 불이익은 조합가입자가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업무대행사와 모집대행사는 지산 지주택의 전신인 추진위와 업무대행영역을 체결했고 지산지주택이 계약을 그대로 승계했고, 정상적인 조합원 모집계약도 이들을 통해 맺어진 점 등을 보면 지산 지주택은 이중분양이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감독권이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했다"며 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계약서상 지정된 신탁회사의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이체한 것은 과실로 볼 수 있다"면서도 "고령의 A씨가 추진위와 지산 지주택이 별개의 단체라는 점을 알기 쉽지 않고 이중분양 계약 체결 장소도 주택 홍보관 인접을 보면 증거실로는 보이지 않아 지산 지주택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부당이익 반환 청구의 이유는 인정되고 1심의 결론을 배척할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지진 대피 이렇게 전북지역 역대 최강의 지진이 부안에서 발생한 다음날인 13일 광주시 북구청어린이집에서 열린 재난안전교실에서 아이들이 지진 대피 훈련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가거도 해상 선박 충돌 뺑소니...3명 사망·실종

도주한 홍콩선적 컨테이너선 검거

홍콩선적 대형 컨테이너 선박이 신안 가거도 해상에서 조업중인 한국 어선을 들이받아 한국 선장이 숨지고 외국인 선원 2명이 실종됐다.

목포해경은 홍콩 선적 대형 컨테이너 선박 A(9734 t 급, 선원 19명)호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불집야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호는 이날 새벽 12시 30분께 신안 가거도에서 북동방향 18.5km 떨어진 해상에서 장어통발어선 B(33t 급·통영 선적)호를 충격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호가 전복돼 선원 총 9명 중 한국인 선장이 사망했고, 인도네시아 출신 외국인 2명은 실종돼 해경이 구조·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나머지 6명(한국인 3명, 외국인 3명)은 사고 4시간 여만에 인근을 지나던 어선에 의해 구조됐다.

구조된 선원들은 해경에 "조업 중 다가오는 선

박을 향해 경적을 울렸으나 충돌하고 지나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A호의 V-PASS(어선위치발신장치)와 B호의 AIS(자동식별장치) 등을 분석해 B호를 사고 선박으로 파악하고, 사고 해역으로부터 68km 떨어진 곳에서 B호를 붙잡았다.

A호의 선체 앞부분에서 페인트 자국 등 충돌 의심 자국을 확인한 해경은 배를 포획함으로 옮겨 충돌 여부와 도주 이유 등을 조사 중이다.

일본에서 출항해 중국으로 향하던 B호의 중국 국적 승선원 19명은 해경 조사에서 목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유치원 선정 금품 전 시의원 재판부 검찰에 배임수재 혐의 추가 요청

'매입형 유치원' 선정과 관련 청탁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최영환(40) 전 광주시의원에 대해 예비적으로 배임수재 혐의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302호 법정에서 행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 심리로 지난 12일 열린 최 전 의원 재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에게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

가해 줄것을 요구했다.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는 주위적 혐의(뇌물수수)와 별도로 예비적 혐의까지 들여다 봐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혐의자체를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과는 다르다. 재판부는 "매입형 유치원 심사에 대한 광주시의원의 직무 관련성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직무관련성 여부와 별개로 배임수재 또는 배임수재 예비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추가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검찰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 군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도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